

# 민주 “尹, 특검 입장 못 밝힐 회견이라면 철회해야”

이재명 “국민 눈높이 타당한 입장을”  
박찬대 “특검 수용 없으면 제2 개사과”  
조국 “김 여사 논란 밝히고 특검 수용”  
여권 “변화·쇄신 조치가 반드시 필요”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대화하고 있다. 뉴스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담화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 전격 수용 없는 대국민 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담화는 ‘담와’가 될 운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 조작, 뇌물 수수, 특혜 의혹, 공천 거래 등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범한 국민처럼 수사를 받고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받겠다고 직접 표명해야 한다”며 “그 정도 입장도 분명하게 답지 못할 회견이면 철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토를 달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거나 공을 국회로 떠넘긴다거나 동문서답으로 핵심을 피한다거나 어설픈 사과쇼는 분노와 저항만 부를 뿐”이

라고 봤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궁여지책으로 내놓는 알맹이 없는 대국민 담화에 다시 속을 국민은 없다”며 “진정 국민을 두려워 한다면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가세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부부의 국기문란, 국정농단 실상을 국민들께 소상히 자백하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라”며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탄핵돼 감옥으로 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면 말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국민 담화 시점을 두고 “아주 미묘하다”며 “명태군 씨의 검찰 소환조사 하루 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설마 명씨가 소환조사 당일 윤 대통령이 원치않는 얘기를 할까 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전에 연막 작전을 펴는 건 아닌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건 아니겠소”라며 “깔끔하게 사과하고 특검을 받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김 여사 문제와 명태군씨와의 통화 녹취 등 최

근 파문이 일고 있는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박절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운운하면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메시지에 △채해병 순직 사건 외 압 의혹 등 규명 △김건희 특검법 수용 △과도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중단 △의료대란 사과 및 여야정협의체 해결책

마련 등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내에서는 변화와 쇄신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4일 명태군 씨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 개각 단행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각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공개 요구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국면 전환용으로 인위적인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인적 쇄신이라는 건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친윤계는 한 대표가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이견을 보이면서도, 변화와 쇄신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목소리를 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지난 5일 ‘배승희의 뉴스파이팅’ 라디오에서 “(윤산에서) 필요한 조치와 국민께서 납득할 만한 변화는 있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김문수 의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전남도·순천지역 예산 확보 총력



산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됐던 순천과 전남도 예산 확보

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지원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 △갯벌 해양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복원 사업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거 삭감된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 예산과, 순천과 전남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박미정 시의원 “광주 쪽방 거주자 1천명 육박 대책 시급”

광주에 비주거시설인 쪽방 거주자가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나 조리 공간이 부족하고 화재에도 취약하다. 전수조사 결과 쪽방 거주자는 △동구 265명 △서구 114명 △남구 45명 △북구 480명 △광산구 32명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동구 대인동과 계림동에 쪽방 거주민이 많다고 알려진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박 의원은 “쪽방촌 거주민 상당수가 사회와 단절된 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구 쪽방상담소 외에 또 다른 거점 지원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성현 기자

이어서 “대부분 1인 가구로, 기존에 알려진 290여 세대보다 3배 이상 많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쪽방은 하나의 방을 여러 개로 나누거나 원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어서 식

## 민주 주축 ‘임기 단축 개헌연대 모임’ 출범

이번주 정식 출범... “2년 단축”  
‘보수’ 개혁신당 합류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통령 탄핵’에 더해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6일 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임기 단축 개헌연대 준비 모임’이 이르면 8일, 늦어도 11일 정식 출범한다.

모임 이름은 ‘국민주권 실현 연대’나 ‘국민주권 행동 연대’로 변경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심판한다는 점을 부각해 지지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장정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

주당 의원과 황은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도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모임은 헌법 부칙을 개정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5월까지로 2년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부치는데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들은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 탄핵

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탄핵은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헌은 탄핵과 달리 법리논쟁이 불필요하고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여권 입장에서도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그나마 수용하기 쉬운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개헌연대 준비모임은 기자회견 당시 20여명으로 시작했지만, 야권 의원 3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도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주 “올해 안에 상법 개정 반드시 추진”

주식시장 활성화 TF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속 조치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지자 소액주주는 물론 전통적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주주 이익을 보호

하는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 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TF 단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 재선 오기형 의원이 맡았으며, 출범식엔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해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한다며 정부·여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액주주 이익을 탈취하다시피 뺏어가는 불공정한 판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국민 앞에 반대할 수 있겠느냐”며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려는 노력인데 정부·여당이 반대할 수 있겠나.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 전제로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